



인천시의회 '도박·방화·선거법 위반·노인 비하' 전과자 의원이 의장 출마설 2일차 기자회견 또 충격

인천시의회 별관 앞에서 6월 12일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은 13일, 2일차 다시 재현되면서 의장으로 출마설이 나오는 특정 후보를 두고 '합량미달', '부적격'이라는 시민단체 비판이 거센 가운데 회원은 '지역지도 장난'을 친다는 논조 물타기 비아냥이 나오면서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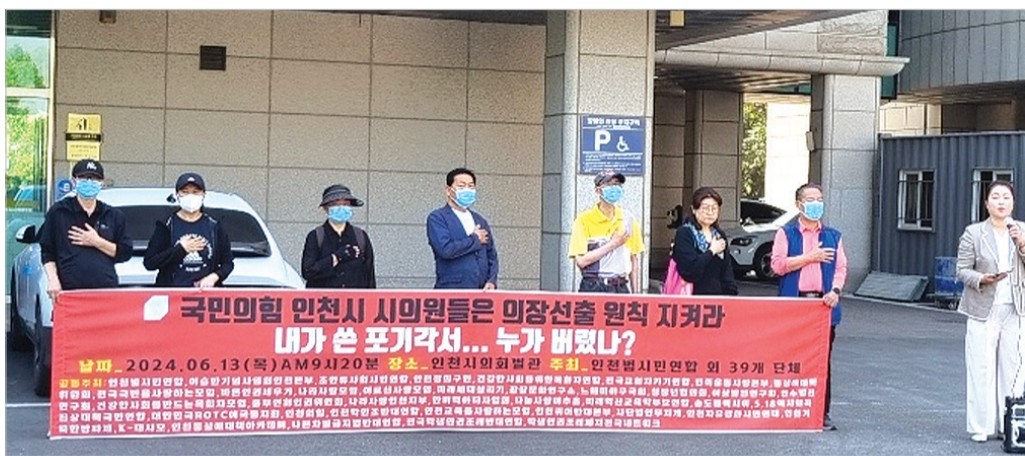
39개 범시민단체가 2일차 포문을 열고 있다. 동네 반장선거냐며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한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등 위원장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서명을 해놓고도 낮이 두껍기가 천하무적일 만큼 선례가 생기기 일보 직전인 인천시의회가 될 전망이다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 12일 우연하게도 진보 측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이 직접 후반기 의장 출마 후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의원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은 그간 활동의 결은 달랐지만, 특정 의원에 대해서 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의장출마를 포기할 줄 몰라 포기하라는 범시민단체 기자회견은 계속되고 있는데 인천평복은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 과거 행적을 확인한 결과 한민수 의원이 의장으로서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과거 사건을 다시 소환해 파문은 더욱 확산이 되고 있다.

평복이 실명으로 밝힌 부적격 한민수 의원 사건은 △2012년 남동구의회 방화 위협 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선거구 주민에게 식사 대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 원 △2016년 공무원 등과 불법 도박으로 긴급체포 △2022년 인천시 행정사무감사 중 고령 노인 비하 발언을 꼽았다.

진보단체가 이런 인물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공개 천명함에 따라 의장선거 논란은 더 증폭되는 양상이다. 도박과 관련해서는 본지가 재차 확인결과 당시 현직 공무원은 30만 원 벌금(한민수 의원 동일액수 추정)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수 의원은 공동 도박범죄였다.

이처럼 인천 범시민연대는 13일 인천광역시의회 별관 앞에서 또 전반기 상임위원장들을



범시민단체 2일차 기자회견 모습

비난했는데 "2일차 기자회견에 시민들의 관심은 더 쏠리면서 그 한심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장이 시민의 아버지라면 의장은 어머니의 역할이란다.

김인희 인천 범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천시의회를 신랄하게 비난했는데 "허식 의장을 탄핵한 물지각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맡으면 후반기에 의장으로 나오지 않는 룰을 어기면서까지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당시 허식 전 의장은 5,18과 관련된 스카이드일리 신문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진보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최근 불송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현재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국힘 중앙당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최고 결재권자 승인만 남아 있다. 인천시의회 의장 탄핵은 한민수 운영위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일로 허식 의장은 억울하게 내몰리며 의장직을 사직해야 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정작 자신이 의장이 되고자 꿈을 꾸어 한 의원 범죄 이력은 더 뜨겁게 부상하고 있다.

한편, "정해권 산업위원장은 전반기 위원장을 맡았으면 후반기 나가지 않은 것이 맞다"라는 발언이 있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도리'라며 언론사에 의견을 낸 사실이 전

해졌다. 한민수 운영위원장처럼 의장출마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과 결이 달랐다.

정해권 산업위원장을 언론이 의장출마 구색 맞추기 일방적 거론으로 감지된다. 정 위원장 발언은 누가 나가니까 나간다는 의견으로 전반기 다른 위원장을 향한 일침으로 들린다. 의장을 나가지 말자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 추정해 보면 제일 근접한 의원은 한민수 의원을 두고 한 말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범시민단체는 의장 출마설이 나오는 특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도박 범죄자 및 방화미수는 중대한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범죄자"라고 규탄했다. 첫 기자회견 같은 날 12일 인천평복이 한민수 의원 실명을 거론했다. 범시민단체는 이날 관련 법령과 헌법 국민의 권리를 낭독하면서 "짬짬이 의정 활동에 대해 정신을 차리라는 메시지"가 뼈를 때렸다.

오는 17일 원내대표 선출되면 20일 의장 입후보 등록순으로 원구성이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특정 후보가 유정복 인천시장을 팔고 있다는 의혹도 의원들 사이에서 파다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파는 성냥팔이 소문은 또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역지 논란도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민수 의원 의장출마와 관련해 논란에서 비껴간 인물로 묘사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의 중심인물이라 가짜뉴스로 현혹시킨 꼴이 됐다. 현실과

정반대의 논조라고 한다. 또 다른 A언론은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만 거론하며 '눈치작전'이란 보도로 글재주만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지난 12일 시의회 홍보 관계자가 기자회견 장소에서 인천 우수 지역지 출입기자를 만나는 장면이 목격됐다. 다시 지방기자실 복도에서 만남을 이어간 사실도 있었다. 허식 의장에게 고소를 당한 기자와 왜 만남을 기자회견이 일어나자 연속적으로 목격이 됐는지 의구심은 증폭된다. 다른 기자 기명의 보도는 현장 상황과 달랐다는 것이고 상임위원장들만 거론됐다.

한편, 국민의힘 시의원들 배신의 정치를 범시민단체가 지적했는데 문제의식이 없는 의정활동에 어려운 국힘당 현실을 알고도 지방 정치인 시의원들이 더 찬물을 붓고 있다는 쓴소리는 이는 권력을 탐하려는 '소탐대실'에서 나온 결과물로 풀이되고 있어 자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의장 출마가 예상되는 이는 국민의힘 김대중(미추홀2, 주안1·2·3·4·7·8동) 의원·이인교(만수2·3·4·5동) 의원·정해권 의원·한민수 의원 등이다. 하지만 정해권, 한민수 의원은 전반기 위원장이라 의총에서 나올 수 없는 부의가 표결로 의결되면 김대중, 이인교 의원이 유력해 보인다.

남동을 한민수, 이인교 의원은 같은 지역구 시의원이다. 2명이 의장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적절해 다른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0일 의장 후보등록 후 의장이 선출되는데 1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선관위를 꾸려 선거가 시작된다. 전과자 및 전반기 위원장들이 출마할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민수 의원은 한 언론에 의회 진행이 끝나면 방화와 관련해 입장표명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의장출마는 끝까지 간다는 말도 들리고 있지만 산 넘어 산인 갈등의 씨앗은 의장출마로 인해 나왔다. 범죄 이력 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면서 반발 기류가 거세 난장판 의회로 비추어지고 있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

인천 강소연구개발특구, 3주년 맞은 행사 개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인천강소특구) 사업이 이달로 지정 3주년을 맞이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강소특구는 지난 2022년 6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지정돼 인천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고, 기술사업화와 생산거점을 위한 배후공간으로 종합환경연구단지,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구 환경산업연구단지), 검단2일반산업단지(27년 개발완료 예정) 일대 총 2.22km²다.

같은 해 7월 과기정통부, 인천시, 인천대, 인천 서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천도시공사 등이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인천대학교와 인천 소재 환경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처리, 폐기물 자원화 및 대체물질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환경관리 등의 기술사업화 지원에 본격 시동을 걸고 힘차게 출발한 후 2년 동안, 연구소

기업 설립 20개, 기술이전(출자) 63건, 신규창업 27건, 일자리 창출 196명, 매출 160억 원, 투자연계 108억 원 등 당초 목표대비 120%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냈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을 책임져 온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화력 및 열병합 발전시설, 에너지 공급기관, 산업단지 등 다양한 환경·에너지 시설이 있어 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은 지역이다.

반면, 국가정책에 따라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와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 환경산업의 메카로서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화(R&BD) 기반시설(인프라)이 집약된 최적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인천강소특구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를 특화분야로 하는 국내 유일의 환경 특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기술핵심기관과 배후기관 중심의 환경산업 연구·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를 포함한 참여 기관(기업)들은 인천대를 연구개발(R&D) 거점지구, 환경산업 연구단지 일대를 기술사업화지구, 검단2산단을 생산거점지구로 해 △환경오염 측정 및 처리 △폐기물자원화 및 대체물질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환경관리 특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사업화를 거쳐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술 이전 및 연구개발사업화(R&BD) 활성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내 대학을 비롯한 환경분야 공공 연구기관과 손잡고 특화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자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백민숙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인천강소특구가 환경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환경기술 거점도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 발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